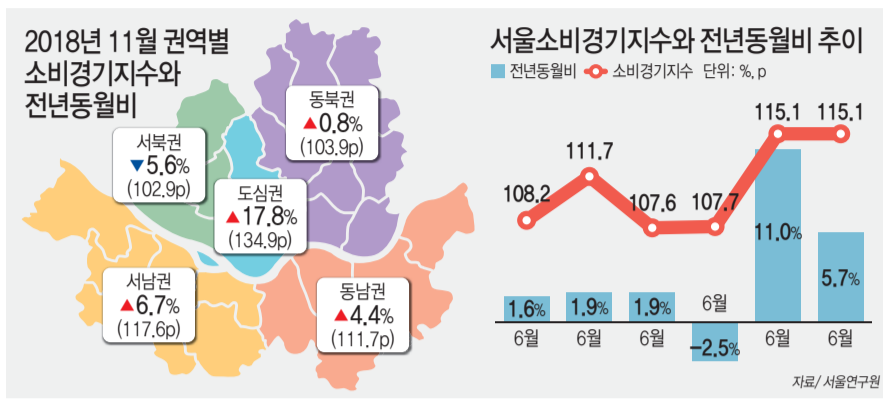


카드매출로 본 서울시 업종·지역별 소비 현황

# 가전·IT 무점포 소매 활황... 주점·커피숍 부진

서울 소비경기지수 5.7% 올라  
도심권은 전년 비 17.8% 증가  
생필품 10개 중 6개 가격 상승



지난해 11월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소비 호조로 서울의 소비경기지수가 5.7% 상승했지만 숙박·음식점업 지수는 하락해 내수 침체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 아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명절 등 계절 요인이 없는 달 중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속하는 생활 밀착 12개 업종의 매출을 분석해 지수화한 것이다.

소매업은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 소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8.5% 증가했다. 특히 무점포소매업이 33.5% 급증했다. 가전제품·정보통신업은

7%, 종합소매업은 6% 증가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의 소비 증가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담배, 연료를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업은 전년 동기 대비 9.6% 올랐지만, 주점·커피전문점업이 5.2% 줄었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3% 증가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순으로 호조를 보였다. 도심권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8% 증가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매업의 무점포소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도심권에 입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매출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 음식료품·담배, 무점포소매업 등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26.9%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이 감소세로 전환해 4% 증가에 그쳤다.

서남권은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6.7%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가전제품·정

보통신, 무점포소매업 등의 오름세 유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이 커지면서 1.7% 소폭 증가했다.

동남권은 4.4% 상승하며 경기호조를 이어갔다.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의 부진에도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업의 소비 증가로 7.1%의 높은 오름폭을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음식점업의 오름폭 둔화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동북권은 0.8% 증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와 무점포소매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에 이어 1.8% 상승하며 호조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으로 감소로 전환, 0.6% 줄었다.

서북권은 5.6% 감소했다. 소매업 중 종합소매업, 의복·섬유·신발의 감소전환과 무점포소매업의 감소폭 심화로 내림폭이 10.2%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세 전환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소비경기지수가 계절 요인이 없어도 5.

7%의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며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소비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활필수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가운데 6개꼴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다. 39개 품목 가운데 23개(59.0%)는 가격이 상승했고 14개(35.9%)는 내렸다. 2개(5.1%)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스낵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평균 1007원에서 12월 1066원으로 5.9%(59원)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농심은 지난해 11월 새우깡(90g) 출고가격을 6.3% 올리는 등 전체 23개 스낵류 브랜드 중 19개 브랜드의 출고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이어 세탁세제(2.4%), 삼푸·두루마리 화장지(2.0%), 맛김(1.6%), 두부(1.3%), 시리얼(1.1%), 된장(1.0%)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간장(1.7~1.8 l) 평균 가격은 이 기간 1만2027원에서 1만1710원으로 2.6%(317원) 내려 가장 많이 하락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경기도

## 경기도, 비정규직 577명 정규직 전환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월 1일자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정부발표 당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은 1064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2252명 등 총 3316명으로 이들 가운데 도 577명과 공공기관 1258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자로 기간제 노동자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1일자로 파견 용역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전환 등 직접고용 작업을 완료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도는 앞서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22개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1단계로 145명,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이 2단계로 2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 정규직 전환 작업이 예정된 인원은 나머지 7개 기관 소속으로 경기도 시공사 17명, 경기연구원 57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3명,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명, 경기도의료원 254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2명, 경기문화재단 77명 등 총 697명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전기매트' 지원

서울시가 한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 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

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위기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같은 저소득 빈곤층도 주요 대상이다.

시는 이렇게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김현정 기자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내실 다진다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공포  
규모 작은 사업자 심의절차 면제 가능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 사업 범위가 명확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이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대상 사업의 규모가 200% 이하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본인 심의 절차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절차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도 명확해진다. 7월부터는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100년 전부터 지켜온 우리 문화재를 보다

서울디자인재단 '간송특별展'

#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수장가들을 비교하며 비웃던 일본 골동계 인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통쾌한 사건이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총독부박물관도 값이 비싸 군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있던 고려청자 희대의 명품을 그들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깔보던 조선의 청년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운학매병'은 감상하다보면 마치 천마리의 학이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천학매병이라고도 불린다. 작품을 구입한 이는 간송 전형필이었다. 고미술 수집가였던 송원 이영섭은 "마치 청과시장에서 사과 몇 알 사듯이 가격도 한 푼 깎지 않고 냉큼 사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간송 전형필의 이야기가 그의

수장품들과 함께 펼쳐진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박물관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간송이 당시 기와집 스무 채 가격을 주고 구입한 청자상감운학매병과 천일파의 집에서 불쏘시개로 사라질 뻔한 검재정선의 화첩 등 국보 6점과 보물 8점을 포함, 총 6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간송 전형필이 자신이 꿈꿔온 대한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준다. 수년간 공을 들여 도쿄까지 가서 구해온 고려청자 이야기, 경성의 중심에서 펼쳐진 경매회에서 일본 대수장가와 치열한 경합을 통해 지켜낸 조선 백자, 고려청자, 추사의 글씨 등이 전시



청자상감운학매병 /서울디자인재단

된다. 최경란 서울디자인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삼일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디자인박물관에서 국내외 기획자와 협업해 디자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